

# '일상이 행복한 시민체감형 안전도시 구현'

### 전주시, 규제개선 통한 도시혁신 추진·재난 재해 안심도시 구현 등 도시·건설·안전 분야 5대 역점시책 제시

전주시는 30일 '일상이 행복한 시민 체감형 안전도시 구현' 비전으로 5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5대 역점시책은 △규제개선을 통한 도시혁신 추진 △안전의 최우선, 재난·재해 안심도시 구현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및 맞춤형 공공주택 조성 △안전하고 밝은 도로 만들기 △생태보전과 자연조화 하천 조성이다.

먼저 시는 도시계획 규제를 과감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시는 올 상반기 중 녹지 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오는 하반기에는 공원 주변 지역의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변화된 시대 여건을 반영해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찾아지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대응 역량을 높이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통합재난상황실과 재난 예·경보 시설,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상황관리 및 초동 대응력을 높여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공덕·조촌·미산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성결·서서학10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자연



전주시가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탄탄한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재난에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높은 주거비와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까지 총 82호의 공공임대주택

을 공급했으며, 올해는 국토부에 36호의 청년 매입임대 주택 신규 배정을 요청하는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전자계시대를 시범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대도 확충한다. 또, 불법광고물 정비영역을 체결해 취약시간대에

도 공백없는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동문길과 객리단길 일원에 대해서는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해 도심 가로경관을 개선한다.

나아가 시는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 △우아~신리 외곽순환도로 구축 △새만금~김제~혁신도시를 잇는 지방도 702호 국도 승격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

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해 원활한 교통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고효율 LED등 교체·신설 및 전선 지중화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천과 삼천 등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총 2억 원을 투입해 준설, 잡목 제거, 조도 개선, 공중화장실 설치, 하천 출입 차단시설 및 CCTV 설치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2024년은 전주 대변혁의 그림을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미래로 도약하는 도시를 만들고 동시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시민이 행복한 전주 만들기 최선"

###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이 30일 부산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해당 상은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를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 평가를 기반으로 수여한다.

세부적으로 지방자치 분권 기여와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 주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관한 역할 평가를 통해 수상을 결정한다.

이 의장은 9~11대 전주시의회 의원직을 역임하고 12대 의회에서는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4선 의원이다.

또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과 정책 제안은 물론,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장은 "시민들이 믿고 맡겨주신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감사할 따름"이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츄츄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 전주시 덕진구, 긴급복지지원 확대 생계·의료 지원

덕진구(구청장 김봉정)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확대 내용은 생계지원 기간을 원칙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생계비도 4인 기준 1,620천원에서 1,834천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연료비를 기존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며, 금융재산 기준(1인 600만원) 역시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823만원으로 상향했다.

덕진구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금융재산 기준은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28억 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예정이다.

주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범죄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등 '갑작스러운 위기가구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2023년에 2,964건, 총 24억

8,700만원의 위기가구 긴급복지비를 지원했다.

올해도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자생단체와 복지관, 병원, 학교, 주민 등에게 집중 안내·홍보하고 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다"며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복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알고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덕진구청 복지지원팀(063-279-6970, 270-6781)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해도 상담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사랑상품권' 설 명절 맞아 월 구매한도 두배 확대

### 2월 한 달간 1인당 기준 50만원→100만원 상향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전주시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폐지카드)의 월 구매한도가 두배 상향된다.

전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전주사랑상품권(폐지카드)의 월 구매한도를 오는 설 명절이 낀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배 상향 조정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설 명절을 맞아 고급리·고급가·고환율의 영향으로 체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식·밥상 물가가 높아져 있는 만큼,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는 구매한도 상향과 더불어 전주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기존 21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90억 원 확대해 발행하고, 캐시백 10%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또, 2월 추가 50만 원 총정분은 연간 구매한도(200만 원) 합산에서 제외된

다.

단, 전주사랑상품권의 최대 보유한도가 150만 원인 만큼 100만 원을 일시에 충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충전잔액을 50만 원 이하로 소진한 후 충전해야 한다.

한편 전주사랑상품권 신규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전주사랑상품권 앱을 내려받아 신규 가입 후 모바일 앱에서 카드를 신청하거나, 전주 거점 전복은행에 방문하면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지역 96곳 대부업체 대상 실태조사 추진

### 시, 3월 11일까지 건전한 금융 질서 확립 위해 실시

전주시는 올바른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운영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시는 오는 3월 11일까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96곳을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시는 대부업체의 일반현황과 대부·중개·차입 현황, 자

산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대부업체 일반현황 변경 신고 여부 확인과 보고서 허위·착오 기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과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 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를 20%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한 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영숙 전주시 민생경제과장은 "경기불황의 여파로 무분별한 광고와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건정 영업행위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

관공각

내아